

민주화가 경제적 삶에 미친 영향

李 天 杓*

〈목 차〉

- | | |
|---------------------------|-----------------------|
| I. 민주화와 경제발전 | IV. 실제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시각 |
| II. 경제생활의 제단면에 대한 민주화의 효과 | V. 앞으로의 경제변화에 대한 전망 |
| III. 바람직한 경제제도 등에 대한 시각 | VI. 소결 |

民主化와 삶의 質에 대한 國民意識研究 중 경제관련 부문에서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나를 보고,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변화가 경제생활의 여러 斷面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전반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경제의 여러 단면에 대한 바람 내지 價値判斷을 점검한 뒤, 김영삼정부가 그러한 바람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I. 민주화와 경제발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두 가지 대립되는 목표라고 설정한 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9%가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6%가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50~60대는 60% 이상이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20대는 36%만이 그러하다고 응답하여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31%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45%가 경제발전이 더 중

*서울대, 국제경제학

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55%가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저소득층이 경제발전에 대해 강한 가치부여를 하고 있음을 미약하나마 볼 수 있었다(표 2 참조).

민주정치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이 검토되었다. 그중 국가의 경제발전에는 대해서는 응답자의 71%가 이것이 민주정치 발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대보다는 50~60대가, 50~100만원의 저소득층보다는 15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비율이 높다(표 3 및 표 4 참조). 또 국민들의 경제생활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0대가 60대보다 이 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150만원 이상 고소득층보다는 그 이하 저소득층이 이 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다(표 5 및 표 6 참조). 나아가 빈부격차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젊은층의 중요성 인식의 강도가 높은 한편 소득계층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 및 표 8 참조).

민주정치발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경제생활보장(24.7%), 국가의 경제발전(23.3%)이 공평한 법제도(21%)나 빈부격차해소(16%)를 앞서고 있었으며, 정치과정과 관련된 변수인 정치적

〈표 1〉 연령별 민주화와 경제발전간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민주화가 더 중요	30.9	29.5	20.7	19.0	23.1	26.3
경제발전이 더 중요	35.9	50.0	55.6	61.5	63.1	49.2
둘 다 중요	33.1	20.5	23.7	19.5	13.8	2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1.85$ d.f.=8 p<.01

〈표 2〉 소득수준별 민주화와 경제발전간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민주화가 더 중요	23.5	27.2	28.0	25.9	23.9	26.3
경제발전이 더 중요	55.3	50.2	50.0	48.1	45.1	49.2
둘 다 중요	21.2	22.6	22.0	25.9	31.0	2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21$ d.f.=8 p=n.s.

〈표 3〉 연령별 민주정치발전에 대한 경제발전의 중요성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31.5	26.2	30.6	25.9	26.2	28.6
중요하다	68.5	73.8	69.4	74.1	73.8	7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75$ d.f.=4 p=n.s.

〈표 4〉 소득수준별 민주정치발전에 대한 경제발전의 중요성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32.9	34.1	27.2	29.2	19.7	28.2
중요하다	67.1	65.9	72.8	70.8	80.3	7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28$ d.f.=4 p<.01

〈표 5〉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국민경제생활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35.9	28.7	36.6	34.5	40.0	33.9
중요하다	64.1	71.3	63.4	65.5	60.0	6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98$ d.f.=4 p=n.s.

〈표 6〉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국민경제생활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36.5	31.4	29.8	34.7	37.1	33.0
중요하다	63.5	68.6	70.2	65.3	62.9	6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29$ d.f.=4 p=n.s.

〈표 7〉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28.1	36.1	42.2	40.8	38.5	35.7
중요하다	71.9	63.9	57.8	59.2	61.5	6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5.49$ d.f.=4 p<.01

〈표 8〉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중요치 않다	37.6	34.1	33.5	35.6	35.7	34.8
중요하다	62.4	65.9	66.5	64.4	64.3	6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5$ d.f.=4 p=n.s.

자유(10.2%)나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4.7%)는 의외로 별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요인 중시의 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강했으며, 국민들의 경제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시된다는 시각은 저소득층일수록 강했다(표 9 및 표 10 참조).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대립시키며 비교하는 설문에서 이상과 같은 응답은 우리 국민 일반이 경제발전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이 민주화의 선결조건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일면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지난 30여년간의 고도 경제성장 및 권위주의 정치환경하에서 정부에 의한 경제제일주의 홍보의 반영일 수도 있겠으나, “곳죽이 차야 예절을 안다”는 옛말처럼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단계에서는 민주정치를 보장하는 섬세한 정치절차와 법제보다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우리 국민의 근본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될 듯하다.

이러한 추론은 나이가 든 계층일수록 경제발전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젊은 계층일수록 민주화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측면을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나이가 든 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아온 계층으로서 권위주의 정부시절을 好不好問에 지내온 계층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젊은 계층보다 이들이 실제적 경제생활의

〈표 9〉 민주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7)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정치적 자유	16.7	9.9	9.1	1.2	3.3	10.2
국가의 경제발전	22.6	22.3	22.4	26.7	27.9	23.3
공평한 법제도	17.8	23.7	19.4	26.7	13.1	21.0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	4.5	5.5	5.2	2.9	4.9	4.7
빈부격차의 해소	15.3	16.3	15.1	19.8	13.1	16.1
국민의 경제생활 보장	23.1	22.3	28.9	22.7	37.7	2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2.63$ d.f.=20 p<.01

〈표 10〉 민주정치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5)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정치적 자유	3.6	9.7	10.4	13.4	9.9	10.2
국가의 경제발전	20.5	22.8	24.3	23.1	24.5	23.5
공평한 법제도	14.5	17.8	20.6	23.1	25.0	20.8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	4.8	5.4	4.9	3.2	5.7	4.8
빈부격차의 해소	22.9	17.0	15.7	16.7	12.3	16.1
국민의 경제생활 보장	33.7	27.4	24.1	20.4	22.6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3.30$ d.f.=20 p=n.s.

중요성을 실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들은 어차피 겪어온 권위주의 정치시기를 전면 부정해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고 여기는 계층일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비민주적 정치풍토 하에서나마 경제발전을 해온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가치부여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젊은층은 권위주의 정치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초기조건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화라는 정치 현상 및 그것을 가져오는 정치적 자유나 정당활동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층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가치부여도 상대적일 뿐 절대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역시 경제제일주의의 혼란 내지 세뇌를 받은 대한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 아직 우리가 민주화의 추구때문에 경제발전을 경시할 수는

없는 개발도상국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엄숙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표증하는 것이라고도 보인다.

이러한 근본인식은 정치·경제·사회단체의 가입을 통한 실제적 행동의 측면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된다.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만이 가입하고 있음이 응답되었으며, 30~50대의 연령층에서만 50~200만원 소득의 중간소득층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1 및 표 12 참조).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8%가 가입하고 있으며, 역시 30~50대의 중년층과 50~200만원대의 중간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었다(표 13 및 표 14 참조). 지역개발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14.3%만이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40대 이상의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50만원 이하의 상대적 저소득계층의 가입율이 높다(표 15 및 표 16 참조).

이러한 대답은 구체적인 시민운동 등을 통해 민주화를 신장하려는 정치과정에서 우리국민이 다소 소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젊은 계층이 풀뿌리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이상 경제발전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우리의 민주화로 보다 건실하게 착근(着根)되어 나갈 것을 예상하게 하는 징조라 하겠다.

〈표 11〉 연령별 환경보호단체 가입비율

(N=1,09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4.8	6.5	6.2	8.6	1.6	5.9
가입하지 않았다	95.2	93.5	93.8	91.4	98.4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97$ d.f.=4 p=n.s.

〈표 12〉 소득수준별 환경보호단체 가입비율

(N=1,03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12.7	5.0	4.0	6.0	7.7	5.9
가입하지 않았다	87.3	95.0	96.0	94.0	92.3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38$ d.f.=4 p=n.s.

〈표 13〉 연령별 노동조합 가입비율

(N=1,09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10.4	8.3	8.6	5.3	1.6	8.2
가입하지 않았다	89.6	91.7	91.4	94.7	98.4	9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51$ d.f.=4 p=n.s.

〈표 14〉 소득수준별 노동조합 가입비율

(N=1,03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6.9	9.9	8.1	8.0	7.2	8.2
가입하지 않았다	93.1	90.1	91.9	92.0	92.8	9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2$ d.f.=4 p=n.s.

〈표 15〉 연령별 지역개발단체 가입비율

(N=1,09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6.3	15.7	17.5	22.1	20.0	14.3
가입하지 않았다	93.7	84.3	82.5	77.9	80.0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8.68$ d.f.=4 p<.01

〈표 16〉 소득수준별 지역개발단체 가입비율

(N=1,033)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가입하고 있다	23.3	14.0	16.3	12.8	10.0	14.4
가입하지 않았다	76.7	86.0	83.7	87.2	90.0	8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9.05$ d.f.=4 p=n.s.

Ⅱ. 경제생활의 제단면에 대한 민주화의 효과

민주화는 경제발전과 서로 대립되는 요소로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그러한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와 경제생활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서 민주화가 되고 나면 인간생활의 다른 단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의 제단면도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화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설문에 대해 별로 관계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7%나 되는 반면 다소 악화시켰다는 대답(25.3%)이 다소 개선시켰다는 대답(21.8%)을 조금 능가하였다. 다소 악화되었다는 계층은 연령층으로는 30~50대이고 소득계층으로는 100~150만원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인 반면, 다소 개선되었다는 계층은 60대 이상 연령층과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표 17 및 표 18 참조).

〈표 17〉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친 민주화의 영향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7)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개선	.8	1.1	2.2	1.8		1.3
다소 개선	20.2	21.0	22.6	20.7	36.5	21.8
별로 관계없다	55.2	43.1	43.8	43.8	42.9	47.0
다소 악화	19.6	29.3	27.0	29.6	17.5	25.3
매우 악화	4.2	5.5	4.4	4.1	3.2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8.61$ d.f.=16 $p<.05$

〈표 18〉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친 민주화의 영향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7)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개선	3.6	1.2	.6	.9	1.9	1.3
다소 개선	27.7	18.1	23.5	24.3	19.8	22.0
별로 관계없다	33.7	48.0	51.2	41.6	47.6	46.6
다소 악화	27.7	29.1	19.2	27.6	28.8	25.6
매우 악화	7.2	3.5	5.5	5.6	1.9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0.40$ d.f.=16 $p<.05$

민주화가 교육기회에 대해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역시 대부분(61.5%)이 별로 관계없다고 보고 있으나, 다소 개선했다고 보는 응답(28.1%)이 다소 악화시켰다는 응답(5.6%)보다 많았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보는 계층은 30대 이하의 연령층과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100~200만원의 중간소득층이었다(표 19 및 표 20 참조).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 소득계층별 差別化에 대한 일관성있는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비경제생활의 단면인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의 측면이나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별로 관계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다소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32.3%와 32.5%로서 경제생활의 측면에서의 응답보다 적극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역시 민주화와 경제생활은 서로 對立的인 關係에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라 보여진다(표 21 및 표 22 참조).

과연 민주화는 과소비를 조장할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렇다

〈표 19〉 교육기회에 민주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6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개선	3.7	3.9	3.6	3.6	3.3	3.7
다소 개선	26.1	31.4	29.1	23.5	28.3	28.1
별로 관계없다	61.5	58.6	59.6	69.3	65.0	61.5
다소 악화	7.4	5.0	6.7	2.4	3.3	5.6
매우 악화	1.4	1.1	.9	1.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02$ d.f =16 p=n.s.

〈표 20〉 교육기회에 민주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96)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개선	3.8	4.4	3.2	2.8	2.9	3.4
다소 개선	30.4	26.8	29.4	30.8	25.7	28.5
별로 관계없다	58.2	58.8	60.3	31.7	65.7	61.1
다소 악화	5.1	8.0	7.0	3.3	4.8	5.9
매우 악화	2.5	2.0		1.4	1.0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6.70$ d.f. =16 p=n.s.

〈표 21〉 자아실현 및 삶의 보람추구에 민주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64)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개선	5.6	4.4	4.9	2.4	5.3	4.6
다소 개선	33.1	37.5	30.0	26.2	21.1	32.3
별로 관계없다	54.5	48.6	52.9	60.1	68.4	53.9
다소 악화	5.1	6.9	10.8	10.1	5.3	7.5
매우 악화	1.7	2.5	1.3	1.2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6.49$ d.f. =16 $p<.05$

〈표 22〉 자아실현 및 삶의 보람추구에 민주화가 미친 영향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0)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개선	3.7	5.5	4.4	4.2	3.8	4.5
다소 개선	18.5	30.4	29.4	38.8	38.8	32.5
별로 관계없다	58.0	53.8	56.6	48.1	52.2	53.5
다소 악화	13.6	7.9	8.2	7.9	4.3	7.7
매우 악화	6.2	2.4	1.5	.9	1.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2.19$ d.f. =16 $p<.01$

고 응답한 사람이 63.5%이고, 젊은 연령층 및 50~200만원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표 23 및 표 24 참조).

반면에 민주화로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76.6%가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 바,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과 50~200만원 중간소득층의 확신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25 및 표 26 참조).

민주화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전체 내지 대다수에게 돌아갔다고 보는 견해가 각각 10%, 33%로서 상당한 반면, 특정한 계급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응답도 22%와 24%로 만만하지 않았다. 후반의 편파적 혜택을 인식하고 있는 계층은 40대 이하의 젊은 계층과 100~150만원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 바, 종래의 패턴에서 소득과 사회적 위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들 계층이 민주화라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대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는가

〈표 23〉 민주화로 인한 불편 중 과소비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3)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불편하지 않다	34.4	39.3	37.8	38.5	43.1	37.6
불편하다	65.6	60.7	62.2	61.5	56.9	6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97$ d.f.=4 p=n.s.

〈표 24〉 민주화로 인한 불편 중 과소비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8)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불편하지 않다	43.5	36.5	35.0	30.7	42.0	36.5
불편하다	56.5	63.5	65.0	69.3	58.0	6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03$ d.f.=4 p=n.s.

〈표 25〉 민주화로 인한 불편 중 비효율적 정부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3)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불편하지 않다	71.5	77.6	78.3	77.0	92.3	76.6
불편하다	28.5	22.4	21.7	23.0	7.7	2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70$ d.f.=4 p<.01

〈표 26〉 민주화로 인한 불편 중 비효율적 정부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8)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불편하지 않다	74.1	76.5	80.1	77.2	69.3	76.2
불편하다	25.9	23.5	19.9	22.8	30.7	2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8.68$ d.f.=4 p=n.s.

〈표 27〉 민주화의 수혜층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국민전체	3.9	9.6	14.3	14.9	18.8	10.1
국민 대다수	31.6	34.0	37.2	29.9	31.3	33.1
특정한 계급	27.7	22.7	15.6	23.0	9.4	22.1
소수의 사람들	27.1	21.9	23.8	23.0	20.3	23.9
모르겠다	9.8	11.8	9.1	9.2	20.3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2.55$ d.f.=16 p<.01

〈표 28〉 민주화의 수혜층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8)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국민전체	17.6	1.0.0	9.6	8.4	9.4	10.0
국민 대다수	22.4	34.1	31.0	36.7	37.7	33.5
특정한 계급	20.0	23.0	24.1	20.5	19.8	22.0
소수의 사람들	22.4	18.4	24.3	28.8	24.5	23.7
모르겠다	17.6	14.6	11.0	5.6	8.5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2.17$ d.f.=16 p<.01

해석된다(표 27 및 28 참조).

Ⅲ. 바람직한 경제제도 등에 대한 시각

민주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가 정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제도의 일환으로서 경제제도도 정비·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종 경제제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가 먼저 알려져야 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견해를 점검해 보자.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 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31% 및 44%가 전적 또는 약간 찬성한 반면 20%와 5%가 약간 또는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표 29 및 표 30 참조).

〈표 29〉 의료혜택의 정부부담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31.1	28.0	30.1	33.5	49.2	31.3
약간 찬성	45.4	46.0	44.5	41.6	32.3	44.1
약간 반대	20.7	19.9	19.2	19.7	13.8	19.7
전적 반대	2.8	6.1	6.1	5.2	4.6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7.41$ d.f.=12 p=n.s.

〈표 30〉 의료혜택의 정부부담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4)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44.0	32.7	29.1	29.3	27.5	30.8
약간 찬성	38.1	45.0	45.1	44.7	46.4	44.7
약간 반대	11.9	17.7	18.9	22.3	23.7	19.7
전적 반대	6.0	4.6	7.0	3.7	2.4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9.72$ d.f.=12 p=n.s.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51% 및 38%가 전적 또는 약간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8%와 1%만이 약간 또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다소간 소극적인 반면, 특히 50만원 이하 저소득을 비롯한 상대적 저소득계층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표 31 및 표 32 참조).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7%와 29%가 전적 또는 약간 찬성하는 데 비해 39%와 15%가 약간 반대 또는 전적 반대를 하고 있어, 실업보험 제도 등에 대한 필요를 보다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실업수당 등을 찬성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33 및 표 34 참조).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44%와 38%가 전적 내지 약간 찬성하고 13%

〈표 31〉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1)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49.0	49.3	52.2	59.2	52.3	51.4
약간 찬성	39.8	41.3	38.7	30.5	38.5	38.6
약간 반대	10.9	7.7	8.3	9.8	6.2	9.0
전적 반대	.3	1.7	.9	.6	3.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7.41$ d.f.=12 p=n.s.

〈표 32〉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58.8	50.4	51.2	50.5	49.5	51.1
약간 찬성	35.3	39.2	40.2	35.2	40.6	38.7
약간 반대	4.7	9.2	7.2	13.0	9.9	9.1
전적 반대	1.2	1.2	1.4	1.4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2.26$ d.f.=12 p=n.s.

와 4%가 약간 내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의 적극적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연령계층별로는 이러한 시각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과 반대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고, 200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일수록 약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소극적이다(표 35 및 표 36 참조).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하여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약간 반대 43%, 전적 반대 20%로서 찬성의견인 전적찬성 7%나 약간 찬성 30%를 다소 능가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고 저소득층에서 반대의견이 강하다(표 37 및 표 38 참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 찬성 15%, 약간 찬성 28%, 약간 반대 35%, 전적 반대 22%로서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전적 반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고소득자의 반대 경향이 조금 강하다(표 39 및 표 40 참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는 좁혀질수록 좋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표 33〉 정부의 실업자 금전지원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12.0	17.6	19.3	23.5	14.5	16.9
약간 찬성	27.5	27.1	27.6	35.9	38.7	29.2
약간 반대	47.1	39.9	36.8	25.9	30.6	39.0
전적 반대	13.4	15.4	16.2	14.7	16.1	1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1.91$ d.f.=12 $p<.01$

〈표 34〉 정부의 실업자 금전지원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6)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21.0	19.2	15.9	17.8	15.1	17.3
약간 찬성	30.9	28.6	29.6	26.3	29.7	28.8
약간 반대	28.4	36.1	40.0	41.3	45.3	39.5
전적 반대	19.8	16.1	14.5	14.6	9.9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27$ d.f.=12 $p=n.s.$

전적 찬성 66%, 약간 찬성 29%, 약간 반대 4%, 전적 반대 1%로서 찬성측이 압도적이다. 나이가 이러한 견해는 연령이나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통적으로 강하다(표 41 및 표 42 참조).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 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더 게을러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 찬성 6%, 약간 찬성 27%, 약간 반대 39%, 전적 반대 28%로서 반대 견해가 훨씬 강하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측 입장이 강한 반면 나이가 적을수록 반대측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찬성측 의견이 강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표 43 및 표 4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의료혜택, 인재에 대한 교육기회보장,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목적 조세정책, 빈부격차 해소의 원칙, 등 基本的 需要(basic needs)의 충족이나 형평소득분배의 기본이념 등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거의 모두가 同意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결과는 또한 이러한 理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세금을 더 걷는다거나 세수에 의해 실업자에게

〈표 35〉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41.3	47.5	40.4	44.5	49.2	43.9
약간 찬성	39.7	37.8	39.1	38.7	31.7	38.4
약간 반대	15.9	11.0	13.5	11.0	14.3	13.2
전적 반대	3.1	3.6	7.0	5.8	4.8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3.65$ d.f.=12 p=n.s.

〈표 36〉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5)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50.0	49.4	47.0	38.1	35.4	43.9
약간 찬성	36.9	32.4	38.8	45.1	41.0	38.8
약간 반대	9.5	13.1	9.6	13.0	19.3	12.9
전적 반대	3.6	5.0	4.6	3.7	4.2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4.82$ d.f.=12 p<.05

실업수당을 준다거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를 국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한 지지밖에 보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게 되면 경제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게을러지리라고 보는 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이 정도의 진보 성향을 표명하는 사람의 비율은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꾀해야 한다는 理念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못미치고 있다.

이상의 큰 그림 속에서 각 계층은 문제의 사안에 따라 재빨리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부담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해 나이가 많은 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강력한 지지도를 표시하고 있다든지, 인재의 무조건적 교육기회보장에 대해 저소득층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국유화에 대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 및 고소득층의 반대가 강하다는 점도 이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성격을 띤다.

〈표 37〉 사회복지 예산증대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3.9	6.9	7.0	14.0	14.3	7.4
약간 찬성	26.0	29.8	32.6	33.9	38.1	30.2
약간 반대	48.0	43.5	40.9	33.9	38.1	42.7
전적 반대	22.1	19.8	19.6	18.1	9.5	1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5.47$ d.f. =12 $p<.01$

〈표 38〉 사회복지 예산증대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4)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14.3	6.9	4.1	7.9	9.9	7.4
약간 찬성	22.6	25.1	29.7	30.7	36.8	29.6
약간 반대	33.3	46.7	43.3	44.7	41.5	43.3
전적 반대	29.8	21.2	23.0	16.7	11.8	1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6.50$ d.f. =12 $p<.01$

무조건적 실업수당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젊은층이 비판적인 것은 젊은층의 失業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에서 볼 때 당장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우리 젊은 世代의 건전성을 증거하는 일면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사회복지 예산을 늘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稅金을 부담하게 될 젊은층과 저소득층에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우리 젊은 世代의 건전성을 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의 젊은 世代는 선진 복지국가의 각종 제도를 우리사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념적, 추상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변화에 무임승차(free ride)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원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의 질의 向上은 生産의 側面에 관련해 보는 한 스스로의 努力에 의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층이 많다.

〈표 39〉 택지국유화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6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11.8	18.3	13.1	17.4	10.0	14.8
약간 찬성	28.7	28.9	29.3	19.8	36.7	28.0
약간 반대	39.6	32.2	33.8	35.9	26.7	35.0
전적 반대	19.9	20.6	23.9	26.9	26.7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1.34$ d.f. =12 p<.05

〈표 40〉 택지국유화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9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19.0	18.0	15.5	11.8	10.4	14.6
약간 찬성	35.4	28.5	27.0	25.5	28.0	27.8
약간 반대	20.3	32.0	39.3	37.3	37.4	35.5
전적 반대	25.3	21.5	18.2	25.5	24.2	2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1.21$ d.f. =12 p<.05

IV. 실제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시각

우리 경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질문에 대해 많이 좋아졌다거나 많이 나빠졌다는 의견은 각각 6%와 9%로 소수인 반면, 약간 좋아졌다와 약간 나빠졌다는 의견이 각각 35%와 24%로서 크지 않은 변동, 그것도 다소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동한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50~60대층에서 약간 좋아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30~40대에서 약간 나빠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또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약간 좋아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15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약간 나빠졌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표 45 및 표 46 참조). 이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돈기에 처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아지게끔 된 반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30~40대에 대해 과거와 같은 황금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65.5	64.6	63.6	70.1	64.1	65.5
약간 찬성	30.5	29.3	30.7	25.3	28.1	29.3
약간 반대	3.9	4.1	3.1	3.4	6.3	3.9
전적 반대		1.9	2.6	1.1	1.6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2.12$ d.f. =12 p=n.s.

〈표 42〉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5)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68.2	63.5	64.8	67.1	63.8	65.0
약간 찬성	21.2	31.2	31.4	28.7	30.5	29.9
약간 반대	3.5	3.8	2.6	3.2	5.7	3.7
전적 반대	7.1	1.5	1.2	.9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9.01$ d.f. =12 p<.01

지난 5년 동안 가족의 경제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많이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는 것이 4%와 3%로 소수이고, 약간 좋아졌다는 것과 약간 나빠졌다는 것이 38%와 13%로 그보다 더 많으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다수(41%)로서 경제전체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인정한 24%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간이라는 상대적 정동기에 임해 성장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저소득층의 사정이 다소 나아지게끔 변화했다고 보는 대국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평균 이상으로 경제생활의 개선을 누린 계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계층은 연령적으로는 20~30대로 나타났고, 소득 구분으로는 100만원 이상 중상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30~40대가 경제생활의 향상을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한 반면 20~30대는 개인적으로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부모·친지로부터의 증여가 있었다거나 20~30대의 기대육구가 낮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그 原因으로서 추정해 볼 수 있겠다(표 47 및 표 48 참조).

〈표 43〉 국가경제에 사회복지가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전적 찬성	2.5	7.2	8.0	9.4	10.0	6.4
약간 찬성	18.3	24.4	30.5	35.9	46.7	26.5
약간 반대	42.7	40.6	41.6	32.9	21.7	39.3
전적 반대	36.5	27.8	19.9	21.8	21.7	2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4.97$ d.f. =12 p<.01

〈표 44〉 국가경제에 사회복지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5)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전적 찬성	8.4	8.3	4.7	7.4	5.7	6.5
약간 찬성	42.2	28.0	23.7	27.0	23.2	26.6
약간 반대	22.9	37.4	42.1	38.1	43.6	39.1
전적 반대	26.5	26.4	29.5	27.4	27.5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2.01$ d.f. =12 p<.05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본 설문이 실시될 때까지 미처 1년도 지나지 않았기에 김영삼정부 치적의 경제적 경향을 식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공직자시정 및 金融實名制의 실시라는 두 가지 큰 개혁적 조치를 취해 그 실제 이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도 하였다.

5공화국정부와 비교해 김영삼정부의 치적을 보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선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55%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한 반면 31%와 8%가 약간 내지 매우 성공했다고 보아 약간 또는 매우 실패했다고 본 5%와 1%를 증가하였으나,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매우 성공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별 또는 소득계층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49 및 표 50 참조).

교육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66%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본 반면, 매우

〈표 45〉 지난 5년간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3)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많이 좋아졌다	5.6	3.6	7.8	6.3	7.7	5.6
약간 좋아졌다	37.7	29.8	33.9	38.5	46.2	35.1
거의 변화가 없었다	29.7	25.1	24.3	24.1	20.0	24.5
약간 나빠졌다	21.8	28.7	24.3	19.5	16.9	23.8
많이 나빠졌다	9.2	10.7	7.4	8.0	4.6	8.9
모르겠다	.8	2.2	2.2	3.4	4.6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9.16$ d.f.=20 p=n.s.

〈표 46〉 지난 5년간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많이 좋아졌다	5.9	6.2	5.5	5.1	6.1	5.7
약간 좋아졌다	41.2	38.6	35.5	31.9	31.5	35.2
거의 변화가 없었다	28.2	22.8	24.6	25.9	22.1	24.2
약간 나빠졌다	14.1	20.1	24.6	25.9	28.6	23.8
많이 나빠졌다	4.7	9.3	8.4	8.8	11.3	8.9
모르겠다	5.9	3.1	1.4	2.3	.5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86$ d.f.=20 p=n.s.

성공과 약간 성공이 각각 3%와 22%로서 약간 실패와 매우 실패의 7%와 1%를 앞섰다. 이러한 호의적 평가에 있어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과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특히 호의적이었다(표 51 및 표 52 참조).

경제발전과 관련하여서도 42%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2%와 24%가 매우 성공 내지 약간 성공으로 평가하고 29%와 3%가 약간 실패 및 매우 실패로 평가하였다. 그런 가운데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이, 소득계층별로는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별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사람이 적어지면서 약간 성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53 및 표 54 참조).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53%가 별차이가 없다고 대답한 반

〈표 47〉 지난 5년간 가계상황 변화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4)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많이 좋아졌다	2.2	5.2	3.0	1.7	9.2	3.6
약간 좋아졌다	41.9	38.5	36.8	36.2	29.2	38.4
거의 변화가 없었다	41.3	38.5	42.4	43.1	46.2	41.2
약간 나빠졌다	10.9	13.4	12.6	15.5	13.8	12.8
많이 나빠졌다	3.1	4.1	4.3	2.3		3.4
모르겠다	.6	.3	.9	1.1	1.5	.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2.55$ d.f.=16 $p<.01$

〈표 48〉 지난 5년간 가계상황 변화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많이 좋아졌다	4.7	2.3	2.9	4.2	4.7	3.5
약간 좋아졌다	30.6	36.3	41.3	38.0	41.3	38.7
거의 변화가 없었다	35.3	44.4	40.8	41.7	38.5	40.9
약간 나빠졌다	16.5	13.5	12.7	12.0	11.7	12.9
많이 나빠졌다	8.2	3.5	2.0	4.2	2.8	3.4
모르겠다	4.7		.3		.9	.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3.74$ d.f.=20 $p<.01$

면, 4%와 33%가 매우 성공 및 약간 성공으로 응답했고, 9%와 2%가 약간 실패 및 매우 실패로 응답하여,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은 계층과 저소득층의 평가가 호의적이었다(표 55 및 표 56 참조).

다른 측면과 비교해 보아 김영삼정부는 경제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발전이라는 과거 정부의 주된 치적으로 보아 특히 그러하였고, 민주화의 이념과 상통하는 의료보험제도, 교육기회확대, 주택부족해소 등 문제화 관련하여서는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비경제적 차원에서 받은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였다.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본격적 경제변수와 관련하여 질문해 보았다.

〈표 49〉 의료보험제도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5)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성공	5.3	9.2	10.1	11.7	4.9	8.3
약간 성공	35.0	27.9	30.4	28.7	34.4	31.0
별로 차이가 없다	54.6	59.1	51.5	53.8	45.9	54.8
약간 실패	3.9	2.5	7.5	5.3	13.1	4.9
매우 실패	1.1	1.4	.4	.6	1.6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2.78$ d.f. =16 p<.01

〈표 50〉 의료보험제도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4)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성공	13.4	10.5	6.4	7.0	6.2	8.0
약간 성공	34.1	30.1	31.9	29.9	33.8	31.6
별로 차이가 없다	41.5	50.0	58.5	57.0	55.7	54.4
약간 실패	4.9	9.0	2.6	5.1	4.3	5.1
매우 실패	6.1	.4	.6	.9		.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2.42$ d.f. =16 p<.01

그 결과 고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 42%이고 훨씬 개선과 다소 개선이 각각 1%, 13%인 반면 다소 악화와 훨씬 악화가 38%와 6%로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반응은 연령별로는 차별화되지 않았으나, 소득계층별로는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평균이상의 다소 개선을 인지한 경우가 많은 반면 150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이 평균이상으로 다소 악화로 대답하였다(표 57 및 표 58 참조).

물가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없다는 대답이 22%, 다소 개선이 8%에 불과한 반면에, 54%가 다소 악화되었다고 대답하고 16%가 훨씬 악화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훨씬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계층에는 50~60대와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두드러졌다(표 59 및 표 60 참조).

무역수지와 관련하여서는 34%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 반면에 20%가 개선쪽에 서고 40% 및 7%가 다소 악화와 훨씬 악화의 반응이었다. 이런 중에

〈표 51〉 교육기회확대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63)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성공	3.1	2.3	1.8	4.8		2.7
약간 성공	19.9	21.7	21.6	23.8	38.6	22.3
별로 차이가 없다	65.2	69.9	68.3	64.9	49.1	66.4
약간 실패	9.8	5.1	7.5	5.4	12.3	7.4
매우 실패	2.0	1.1	.9	1.2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7.50$ d.f.=16 p<.05

〈표 52〉 교육기회확대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94)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성공	3.9	3.5	2.1	1.9	2.9	2.7
약간 성공	31.2	24.3	29.0	22.5	20.1	22.6
별로 차이가 없다	54.5	60.8	69.1	65.3	72.7	66.1
약간 실패	7.8	9.4	7.1	8.5	3.3	7.2
매우 실패	2.6	2.0	.9	1.9	1.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9.58$ d.f.=16 p=n.s.

60대가 악화 정도를 덜 크게 생각하였고,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다소 개선됐다는 견해가 많았던 반면 100만원 이상 중상소득과는 다소 악화편을 들었다(표 61 및 표 62 참조).

결국 김영삼정부는 경제발전에 대한 치적, 그 구체적 내용인 고용문제, 물가문제, 무역수지문제에 대해 별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런 가운데 제도변경과 관련이 있는 의료보험제도, 교육기회확충, 주택부족의 해소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물가 등 일상적 경제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소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앞으로의 경제변화에 대한 전망

경제적 치적에 대한 이상의 비교적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는

〈표 53〉 경제발전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4)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성공	1.4	1.4	2.7	4.1	3.3	2.1
약간 성공	21.3	24.0	20.8	29.1	34.4	23.9
별로 차이가 없다	45.7	43.0	40.7	40.1	27.9	42.2
약간 실패	28.0	27.4	32.7	25.0	32.8	28.5
매우 실패	3.6	4.2	3.1	1.7	1.6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2.05$ d.f.=16 p=n.s.

〈표 54〉 경제발전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3)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성공	3.7	2.0	1.5	3.3	1.4	2.1
약간 성공	31.7	29.3	27.4	16.4	17.7	24.2
별로 차이가 없다	29.3	43.0	38.2	46.5	46.9	41.9
약간 실패	30.5	23.4	28.9	31.0	31.1	28.6
매우 실패	4.9	2.3	4.1	2.8	2.9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0.87$ d.f.=16 p<.05

금융실명제라는 개혁적 조치를 실시하였고 또 구정부에서 소홀히했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열의를 쏟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생긴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46%가 별 변화가 없으리라고 본 반면 34%는 커질 것으로 보고 8%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았다. 더 커질 것으로 본 계층은 40~50대 연령층과 소득 2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었으며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차라리 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표 63 및 표 64 참조).

금융실명제로 경제비리가 줄어들고 그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78%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20%는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2%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제일 낙관하고 있

〈표 55〉 주택문제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7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매우 성공	2.0	3.1	5.3	9.3	1.6	3.8
약간 성공	23.8	36.1	35.2	35.1	44.3	32.5
별로 차이가 없다	61.3	52.2	46.7	48.0	39.3	52.6
약간 실패	10.6	6.1	11.9	7.6	13.1	9.2
매우 실패	2.2	2.5	.9	1.2	1.6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7.51$ d.f.=16 p<.01

〈표 56〉 주택문제에서 5공화국 대비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06)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매우 성공	3.8	5.4	2.9	3.3	4.8	4.0
약간 성공	33.8	34.1	33.7	35.5	25.7	32.6
별로 차이가 없다	38.8	49.0	54.0	53.7	58.1	52.4
약간 실패	21.3	8.4	7.0	7.0	11.0	9.1
매우 실패	2.5	3.1	2.3	.5	.5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5.37$ d.f.=16 p<.01

는 반면에 50~60대가 불확실한 전망을 피력하고 있고, 소득계층별로는 15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활성화를 비교적 낙관하는 반면에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불확실성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표 65 및 표 66 참조).

금융실명제로 사채시장이 위축되고 공공 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부분이 커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채시장은 종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견해가 57%로 압도적이고 종전과 같은 정도로 존재하리라는 견해로 8%나 된다. 반면에 사채시장이 위축되고 공공금융이 증대되리라고 보는 입장을 18% 정도에 불과하다. 사채시장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회의적이고 소득이 많을수록 회의적이다(표 67 및 표 68 참조).

김영삼정부 등장 후 교통·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용이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5%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표 57〉 고용문제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69)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훨씬 개선	1.1	1.7			1.7	.9
다소 개선	9.8	17.1	17.2	9.7	8.5	13.4
거의 변함없다	44.1	42.0	36.6	44.8	42.4	42.0
다소 악화	39.9	33.7	41.4	37.6	40.7	38.0
훨씬 악화	5.1	5.5	4.8	7.9	6.8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71$ d.f.=16 p=n.s.

〈표 58〉 고용문제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9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훨씬 개선	1.3	.4	.9	1.4	1.0	.9
다소 개선	15.2	14.8	13.8	11.7	12.0	13.4
거의 변함없다	35.4	40.9	47.2	39.4	43.1	42.6
다소 악화	38.0	38.1	33.4	43.2	39.7	37.9
훨씬 악화	10.1	5.8	4.7	4.2	4.3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51$ d.f.=16 p=n.s.

41%는 더 쉬워질 것으로 대답하고 11%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60대가 더 쉬워질 것으로 낙관한 반면에 20~30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비판하였다. 또 소득계층별로 보면 2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안에서 낙관의 정도가 제일 약함을 볼 수 있다(표 69 및 표 70 참조).

이상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사채시장이 완전히 위축되고 공공금융이 크게 확충되지는 않겠지마는 각종 비리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로 늘어남으로써, 앞에서 인지한 바 이상적인 경제상태로 이행해 갈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는 견해가 그 반대의 견해보다 많음을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나아가 부족한 사회간접본의 확충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어 김영삼 정부의 미래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9〉 물가문제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9)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훨씬 개선	.3	1.9			1.6	.8
다소 개선	7.3	8.7	7.4	6.4	3.1	7.4
거의 변함없다	22.9	21.9	20.0	22.8	21.9	22.0
다소 악화	53.1	54.1	57.8	50.9	53.1	54.0
훨씬 악화	16.5	13.4	14.8	19.9	20.3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9.62$ d.f.=16 p=n.s.

〈표 60〉 물가문제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5)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훨씬 개선	2.4	1.1	.6	.9		.8
다소 개선	8.4	8.8	8.1	6.5	5.7	7.5
거의 변함없다	16.9	20.7	23.5	20.9	24.6	22.1
다소 악화	44.6	52.9	54.8	60.0	54.0	54.4
훨씬 악화	27.7	16.5	13.0	11.6	15.6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3.94$ d.f.=16 p=n.s.

그 결과 김영삼정부가 집권하는 5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는 전반에 대해 많이 좋아지거나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층이 각각 14%와 59%인 반면 약간 나빠지거나 많이 나빠질 것이란 층은 6%와 1%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더 낙관하는 편이고, 소득계층별로는 50~150만원의 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편이다(표 71 및 표 72 참조).

개인의 생활에 관련하여서는 많이 좋아지고 약간 좋아진다는 층이 각각 6%와 50%로서 약간 나빠지거나 많이 나빠진다고 보는 5%와 1%를 압도하고 있으나, 거의 변화가 없으리라는 층도 33%나 되어 전체경제에 대한 전망보다는 덜 낙관적이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고, 소득계층별로는 100~200만원의 중간소득계층이 보다 낙관적이다(표 73 및 표 74 참조).

<표 61> 무역수지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3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훨씬 개선	.6	.8	.5		1.9	.6
다소 개선	17.6	18.4	17.0	22.4	36.5	19.3
거의 변함없다	33.2	34.2	35.3	32.1	36.5	33.9
다소 악화	40.6	40.1	41.7	38.5	23.1	39.6
훨씬 악화	8.0	6.5	5.5	7.1	1.9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0.51$ d.f.=16 p=n.s.

<표 62> 무역수지에서 김영삼정부의 실적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7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훨씬 개선	1.4	.8		.9	.5	.6
다소 개선	24.7	24.3	19.0	14.7	15.4	19.0
거의 변함없다	31.5	33.6	34.9	37.4	31.7	34.3
다소 악화	35.6	35.2	40.4	41.7	43.8	39.8
훨씬 악화	6.8	6.1	5.7	5.2	8.7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8.26$ d.f.=16 p=n.s.

김영삼문민정부 등장 이후 소득분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38%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4%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아 소득분배에 대해 낙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낙관의 정도가 젊은 층에 있어 현저한 것도 이해할 만하나, 5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가장 덜 낙관적인 것은 눈에 띄는 것으로서 문민정부의 소득분배 평준화노력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표 75 및 표 76 참조).

결국 김영삼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등 제도개혁을 하였기에 앞으로도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면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낙관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민은 그러한 개선이 가져올 성과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성숙성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3〉 금융실명제로 인한 조세부담변화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1)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더 커질 것이다	31.5	34.7	36.4	38.2	29.0	34.3
별로 변화가 없을	52.1	49.5	41.6	35.3	37.1	46.0
더 줄어들 것이다	8.6	7.4	7.8	9.8	8.1	8.2
모르겠다	7.8	8.5	14.3	16.8	25.8	1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7.57$ d.f.=12 $p<.01$

〈표 64〉 금융실명제로 인한 조세부담변화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20)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더 커질 것이다	34.1	26.8	33.0	34.3	45.5	34.3
별로 변화가 없을	38.8	46.4	47.0	49.1	46.0	46.4
더 줄어들 것이다	5.9	11.5	7.8	8.8	3.8	7.9
모르겠다	21.2	15.3	12.2	7.9	4.7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4.89$ d.f.=12 $p<.01$

VI. 소결

우리 국민은 과거의 어려운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 종래 經濟第一主義의 神話에 따라 경제가 잘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民主化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민주화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과거 빈곤하던 때 권위주의정권이 민주화의 움직임을 억압하고 그대신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추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사람은 태어나 최소한의 기본적 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결코 정부의 役割이 커지고 복지국가로까지 되는 것을 바란다는 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교육, 의료 등 기본수요의

〈표 65〉 금융실명제에 따른 경제활성화전망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87)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빠른 시간내에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12.5	11.5	13.0	10.7	16.1	12.2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64.9	71.0	64.9	63.9	53.2	66.0
확실하지 않다	20.9	14.5	17.7	24.9	30.6	19.4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1.7	3.0	4.3	.6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39$ d.f.=12 p<.05

〈표 66〉 금융실명제에 따른 경제활성화전망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6)

구 분	49만원 이하	50-99 만원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빠른 시간내에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15.5	13.8	12.8	10.2	10.4	12.3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52.4	62.8	66.3	72.6	69.3	66.2
확실하지 않다	27.4	20.7	18.6	14.4	19.8	19.2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4.8	2.7	2.3	2.8	.5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8.63$ d.f.=12 p=n.s.

요소들은 정부가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직접 어려운 시기를 체험해 보지 못한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이제는 경제발전을 조금 지체시키더라도 민주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민주화 및 사회형평의 추구는 어떤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制度的의 운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라 김영삼정부가 시행한 금융실명제를 크게 지지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성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 측면의 높은 평가때문에 김영삼정부는 물가, 실업, 무역수지 등 실제적 경제현상에서

〈표 67〉 금융실명제로 인한 금융기관활동전망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51)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공공 금융의 증대가 나타날 것이다	13.8	17.9	18.6	23.5	26.9	18.0
2-3년 내에는 공공 금융이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20.3	12.9	21.2	16.0	13.5	17.3
사채시장은 종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57.3	62.2	53.5	51.9	46.2	56.8
사채시장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온존될 것이다	8.5	7.0	6.6	8.6	13.5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4.08$ d.f.=12 p<.05

〈표 68〉 금융실명제로 인한 금융기관활동전망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084)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공공 금융의 증대가 나타날 것이다	25.6	17.7	19.7	15.6	17.4	18.5
2-3년 내에는 공공 금융이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15.9	17.7	18.2	17.0	17.9	17.6
사채시장은 종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41.5	55.2	56.1	61.3	58.5	56.3
사채시장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온존될 것이다	17.1	9.3	6.0	6.1	6.3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8.63$ d.f.=12 p=n.s.

별로 훌륭하지 못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써 과거보다는 낮은 成長率일지 모르나 민주화와 상충되지 않는 확실한 경제발전도 가져올 수 있게 되리라

〈표 69〉 김영삼정부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더 용이할 것이다	37.7	41.5	37.5	47.7	56.3	41.3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8.3	34.4	38.4	30.8	10.9	34.6
더 힘들 것이다	14.5	12.6	8.6	8.7	4.7	11.4
모르겠다	9.5	11.5	15.5	12.8	28.1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5.80$ d.f. =12 p<.01

〈표 70〉 김영삼정부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더 용이할 것이다	42.4	41.9	40.6	45.4	41.8	42.2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27.1	33.1	35.7	34.7	35.7	34.2
더 힘들 것이다	4.7	11.5	11.3	9.3	15.5	11.3
모르겠다	25.9	13.5	12.5	10.6	7.0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8.15$ d.f. =12 p<.01

여겨지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는 것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다. 제도개혁이란 상당한 시일을 거치며 이루어 그 본래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양립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중 어느 측면에 대해서도 눈부신 단기적 성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종래와 성격이 달라진 삶의 질의 개선을, 그것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선을 예상하고 단기적으로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 성숙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많이 좋아질 것이다	12.5	15.8	11.2	14.4	18.5	13.9
약간 좋아질 것이다	59.9	57.9	59.9	62.1	56.9	59.4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18.1	13.4	14.2	13.8	7.7	14.7
약간 나빠질 것이다	4.7	7.1	7.3	2.9	4.6	5.7
많이 나빠질 것이다	.8	1.1	.4	.6		.8
모르겠다	3.9	4.6	6.9	6.3	12.3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32$ d.f. =20 p=n.s.

〈표 72〉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많이 좋아질 것이다	16.5	16.5	13.3	10.6	14.1	13.9
약간 좋아질 것이다	51.8	59.4	61.6	61.6	57.3	59.5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10.6	11.9	15.0	17.1	16.4	14.6
약간 나빠질 것이다	7.1	6.5	4.0	6.0	8.0	6.0
많이 나빠질 것이다	1.2	1.9			.9	.7
모르겠다	12.9	3.8	6.1	4.6	3.3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4.85$ d.f. =20 p<.05

〈표 73〉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6)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많이 좋아질 것이다	5.8	9.0	4.7	2.9	10.8	6.4
약간 좋아질 것이다	52.9	49.7	50.9	40.8	35.4	48.8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32.0	29.5	31.0	46.0	38.5	33.4
약간 나빠질 것이다	4.5	5.5	6.5	2.9	4.6	4.9
많이 나빠질 것이다		2.5	.9	1.1		1.1
모르겠다	4.7	3.8	6.0	6.3	10.8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7.55$ d.f. =20 p<.01

〈표 74〉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21)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많이 좋아질 것이다	3.5	5.4	7.2	5.1	8.9	6.4
약간 좋아질 것이다	36.5	51.3	50.6	54.6	46.0	49.6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34.1	32.6	32.9	31.0	34.3	32.8
약간 나빠질 것이다	8.2	4.2	3.5	6.0	6.6	5.1
많이 나빠질 것이다	1.2	2.7	.6	.5	.5	1.1
모르겠다	16.5	3.8	5.2	2.8	3.8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46.45$ d.f. =20 p<.01

〈표 75〉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소득분배상황에 대한 연령별 평가

(N=1,192)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개선될 것이다	39.1	43.8	28.9	39.7	36.5	38.5
개선도 악화도 되지 않을 것이다	39.9	37.0	40.0	35.1	31.7	38.1
악화될 것이다	5.0	3.6	5.6	4.0	1.6	4.4
모르겠다	15.9	15.6	24.6	21.3	30.2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68$ d.f.=20 p<.05

〈표 76〉 김영삼정부 집권기의 소득분배상황에 대한 소득수준별 평가

(N=1,119)

구 분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개선될 것이다	23.8	41.5	36.7	41.2	43.7	39.1
개선도 악화도 되지 않을 것이다	35.7	33.8	41.6	37.0	37.1	37.6
악화될 것이다	7.1	3.8	4.0	5.6	2.3	4.2
모르겠다	33.3	20.8	17.6	16.2	16.9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5.55$ d.f.=12 p<.05